

# 한미 FTA와 인쇄 · 출판문화산업

김원제 유프러스연구소장 · 언론학박사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산업분야마다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정부의 희망적 주장이나 광고에 반해,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응은 비판을 넘어 저항에 이르고 있다.

FTA 이슈를 둘러싼 갈등은 다분히 감정적이기까지 하다. 면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그렇다면, 인쇄 · 출판문화산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거에 체결된 FTA나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FTA는 체결국 간의 상품 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없애 상품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상품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 외에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무역 · 투자 자유화를 포함한다.

FTA 체결국 간 시장통합의 범위가 넓어지고 폭도 깊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미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도 상품시장 자유화나 서비스 시장 자유화 외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 환경보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반영한 노동자의 권리, 투명한 분쟁해결절차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FTA와 인쇄업, 경쟁력은 있으나...

인쇄업계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품질 역시 미국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이미 세계 인쇄업계에서 사용되는 설비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역시 날로 신장시켜왔다. IT산업 발달에 힘입어 우리나라 인쇄업계는 경쟁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제지/인쇄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로 미미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낮은 수준이다. 제지/인쇄산업 내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2005년 21.7%로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다. 수입의 경우도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제지/인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이고, 대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이며 제지산업의 원료 펄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적 및 정간물 등의 품목에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타 인쇄물(0.45)과 지도(0.048)에서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FTA 타결로 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UR협정 타결로 펄프 및 지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004년부터 완전히 무관세화(0%)된 상황이기 때문에, FTA체결로 인한 수입 물량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인쇄산업 역시 무관세화(0%)되어 FTA체결로 인해 수출입 물량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쇄 제작기술 이외에 마케팅, 기획, 유통과 같은 분야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한데, FTA가 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현재 국내 인쇄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의 시장구도와 수출에 대한 인식 결여로 수출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체계적인 수출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결국 인쇄산업은 콘텐츠 생산 등 고급 산업이 아닌, 주로 미국의 하청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형태를 띠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어관리와 미국 현지의 문화를 습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미국 인쇄물의 특성과 품질, 소비취향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인쇄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한미FTA와 출판업, 지적재산권 문제가 쟁점

지난 2006년 7월 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총 9개 출판단체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FTA 중단, 협의 내용 공개, 저작권 보호기간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한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질서가 무역 자유화란 이름으로 일방적 자본의 논리에 의해 획일적으로 강제된다면 문화적 정체성이 해체될 것이다. 한 사회가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그 사회에 맞게 결정할 문제지 무역거래의 전제 조건이나 협상의 대상일 수는 없다”는 게 그 요지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한미 양국 모두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우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연장, 저작권침해의 범위여부, 중복성 기술제약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과 관

지적재산권 분야는 한미 양국 모두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우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연장, 저작권침해의 범위여부, 중복성 기술제약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련된 국제협약에 부합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70년으로 연장시키고 독점적 문화콘텐츠로부터 로열티를 보다 많이 징수하고자 한다. 1962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는 자칫 사실상 무기한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007년에는 기간연장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FTA 쟁점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FTA가 우리 출판산업에 끼칠 영향을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으로 구분해 전망할 수 있는데, 우선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대된다.

첫째, 출판산업의 첨단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21세기 첨단 정보시대 IT기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쇄출판문화의 첨단 고도화로 세계출판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체계적인 출판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및 수출 활성화 촉진이 기대되며,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 등을 통한 출판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전자출판 시장의 세계 주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세계적 IT기술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 전자출판산업의 주도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결합된 전자출판물을 차세대 핵심 지식문화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겠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의 잇단 표절 및 대필 사태는 출

판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각성이 절실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 FTA와 출판산업의 명암

FTA가 우리 출판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우선적인 문제는 지적재산권 로열티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200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54억 달러 흑자인 반면 서비스 수지는 82억 달러 적자였고, 그 중 약 30억 달러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였다. 세계은행은 지적재산권을 미국 기준으로 강화했을 때 가장 피해가 큰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연간 약 153억 달러 적자)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미국 시장에 100억 달러 이상의 상품 수출추가로 이루어야 하는데, 상품 수출액 가운데는 7, 80% 이상의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지적재산권에는 아무런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500억 달러 이상의 상품 수출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야기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은, 소수의 미국 문화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독점적 문화 상품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를 더욱 연장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 출판계는 지난 1995년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소급 보호를 위해 한 해 수백 억 원의 로열티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제작비용이 평균 7% 이상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로 보호기간 소급보호 시점을 미국 측의 요구대로 연장한다면 학술서적의 출판은 고사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 문화 예술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을 비롯하여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독점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사회의 기술, 산업의 발전과 문화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가 진척

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독점배타적 권리의 부여를 기본 원리로 하는 지적재산권의 특성상 지나친 권리의 강화는 오히려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과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문화적 권리나 정보 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와 충돌하며 공공성을 침해하게 된다.

대다수의 지적재산권이 초국적 자본의 소유와 통제 하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적재산권은 사실상 창작자들의 이익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독점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시킨 것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회복하고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상 정책에 지적재산권을 연계하고 이것을 다자 협정과 양자 협정을 통해 상대국에 강요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직격탄을 맞은 것은 한국이다.

## 문화식민지 시대(??), 위기를 기회로...

고도의 정신적인 작업인 저술과 출판이 하루아침에 붕괴하지는 않을 테지만, 자본의 힘은 사람의 가치관과 일상생활마저 변화시키는 터라 자국의 문화와 지적 전통에 근거한 '토착' 출판이 서서히 와해되거나 약화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출판과 지적인 작업들의 입지도 매우 축소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강화는 문화적 주권 상실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을 축소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적 토양은 무너질 것이고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국민의 권리는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문화식민지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비록 한미FTA는 인쇄·출판업계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대사로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국가적인 정책과제임에 분명하다. FTA는 인쇄·출판문화 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된다. 그 향방은 업계의 미래 준비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다각적인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